

# 남북경협의 전략적 대응 방안

최광석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본 글에서는 현단계 남북경협의 정세상태를 게임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반복게임의 상황에서 진행될 향후 남북한간 경험에 있어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지향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글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 현단계에서와 같은 남북한의 경험에 대한 선호관계 하에서는 다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단순한 반복게임 하에서 상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둘째, 보상보복전략에 의한 상호 협조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협조에는 적절한 보상과 배반에는 보복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보복은 단순한 위협수준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것이어서 상대방이 믿어야 한다. 셋째,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향후 진행될 남북경협을 중점이 불확실한 반복게임으로 볼 때 남북경협의 지속가능확률이 낮을수록 향후 남북경협에 있어 상호 협조적인 경험 전략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남북한의 경험에 있어서 남북 모두 동일 지향적 경험 전략을 택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체제의 체제안정이 선행되어야 힘을 나타내는 것이며,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남한은 본격적인 상호 협조적인 경험의 상대를 김정일 이후 체제로 상정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I. 서론

현단계에서 남북한 경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간접교역 위주로 남북한의 경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1년에서 1994년까지 남북한 교역에서 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위탁가

공무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위탁가공 무역은 1991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최근 들어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인 실적을 기준으로 남북 교역 현황을 보면 1994년에는 2억 2,791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용 면에서 보면 총 남북 교역 규모에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81.2%, 1991년 86.3%, 1992년 93.9%, 1993년

94.8%, 1994년 89.0%로서 1994년에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남북 교역과 함께 남한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대칭적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남한의 참여나, UNDP 주관하의 두만강 개발 사업의 참여, 그리고 제3국에서의 협력방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남북경협 방식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다.

남북한 교역이나 경협이 이와 같은 추세는 남한에서 기대하고 있는 보다 활발한 경협의 진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간접교역, 위탁가공교역 중심의 남북한 경협 또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 정부간의 정책적 협조 하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남한 당국이나 학계 또는 실업계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북한의 현재 입장을 고려하여 남한이 메뉴판식으로 경협의 메뉴를 제시하고 북한은 그들의 구미에 맞는 사항을 택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단속(斷續)을 반복하고 있고, 현재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수로 지원문제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한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을 들고 나와 판문점에서의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등 대북한 경수로 지원문제가 원만히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남한이 생각하고 있는 본격적인 경협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남북경협의 부진한 근본적

인 원인이 남한의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체제 유지적' 경협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우선 이와 같이 상반된 경협 정책의 배경이 되는, 경협을 바라보는 남북한 양측의 선호관계를 규명하고, 남북게임의 상황하에서 전개될 향후 남북한 경협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략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남북한의 경협 정책

### 1. 남한의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

현정부의 통일정책은 1993년 7월 6일 제시된 '남북한의 공존공영과 민족부리의 증진방안'에서 나타난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기조로 하여 1994년 8월 15일에 공포된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통일론'에서 잘 나타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흡수통일을 배제한 가운데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 또한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이와 같은 통일 및 경협 정책은 과거와 달리 그 자체를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이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현정부의 공표가 있었고, 또한 실행의지가 엿보인다는 측면에서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가 대북한 통일정책이나 경협 정책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째, 과거와 달리 문민정부로서 대북한 관계에 있어 정통성 문제로 소극적일 이유가 없으며, 둘째,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내재적인 모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고, 셋째, 동유럽이나 러시아,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으로 사회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에 대한 공식적인 파산선고를 지켜보았으며, 마지막으로 GNP를 기준으로 18배,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9배의 차이가 나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등으로 인해 남북한의 문제는 더 이상 체제경쟁의 입장에서 접근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남한이 진행하고 있는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은 오히려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오랫동안 북한으로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려 왔고, 그에 따라 지난 정부들에서 제기되어 왔던 정권 안보나 체제 경쟁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정책에 식상한 사회저변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대북 문제에 있어 체제 경쟁적 혹은 체제 유지적 접근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경협의 활성화와 통일을 바라는 일반 국민의 여망에 불응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경협이 가지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대한 의의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협은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남북한의 연관효과(linkage effect) 때문에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으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건설을 위한 한 과정이며 또한 이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시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하에 현정부의 통일 및 경협 정책이 체제 경쟁적 혹은 체제 유지적 대북 접근이나 경협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을 통해, 대외개방과 함께 체제불안요인의 유입과 이로 인한 체제붕괴를 두려워하는 김정일 체제에 대하여 체제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고 안정적인 바탕 위에 경협을 이끌어 나가고 이와 같은 성과와 남북협력체제를 궁극적으로 통일로 연결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 2. 북한의 체제 유지적 경협 정책

현재 공식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대북한 경협의 파트너는 미정인 상태이다. 지난 7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래 아직 북한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로의 권력의 공식 승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권력승계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 및 시기가 다각도로 점쳐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 이상설, 효도설, 권력 투쟁설, 합리적 대응설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합리적 대응설이란 김정일의 권력승계 지연이나 김정일 주변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김정일 체제의 합

리적 대응방안을 말한다. 건강 이상설을 통해 김정일 이후에 등장할 권력투쟁의 잠재적인 대상들을 수면 위에 부상시켜 미리 제거하며(다 제거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효도설로 해석되어 주민의 유교주의적 충성을 확보하며, 그의 상반된 이미지(합리적 및 비합리적 성격)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경수로 지원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핵동결 해제조치는 물론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경수로 지원문제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등 승계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합리적 행동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 건강 이상설이 가상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연 이유야 어떤 것이건 간에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문제이다. 1970년대 이래 북한경제는 정체국면이 이어져 왔고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계속하여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곡물생산량의 절대 부족과 함께 생필품 부족은 북한 주민의 기초적인 욕구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며 에너지 부족에 의한 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북한경제의 계속된 침체와 경제난 심화는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간산업부문(에너지, 수송 등)에서의 병목현상은 원활한 산업활동을 저해해 왔으며,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화부족으로 신기술·원자재 및 자본재의 도입이 어렵게 된 것도 경제발전 저해의 또 다른 요인이다. 과다한 국방비 지출은 투자재원이 부족한 북한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대외신용의 상실에 따른 외자유치의 부진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 김정일 체제 또한 대외 개방과 경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남한 일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이다. 북한 또한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는 대외개방과 경제협력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1991년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발표하고, 1992년에는 헌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1994년까지 20여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대외개방과 경험은 근본적으로 체제불안요인의 유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대외개방의 딜레마이다. 북한의 제한적인 대외개방의 태도는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설치와 같은 제한적인 장소에서의 자본주의적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데에서도 알 수 있고, 또한 대북한 경수로 지원문제에 있어서 남한 배제의 원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수로 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공식적인 참여는 향후 경수로 지원 문제에 있어서 남한과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며, 그렇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체제비교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대 서방 경험보다 체제불안요인의 유입이 더 크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은 남한과의 경험에 있어서도 체제 유지적 경험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 3. 김정일 체제하의 향후 경험 전망

북한의 체제 유지적 경험 정책은 곧 이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이와 같은 다소 비관적인 판단은 북한의 대외 주(主) 적대관계국가의 설정에서 알 수 있다. 김정일 체제하에서도 체제 내부의 불만을 유도할 수 있는 대외 지향점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체제불만 요인은 곧 바로 체제유지 집권층으로 방향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주 적대관계국가를 남한에 한정하여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연미반남(聯美反南)의 전략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의 움직임은 특히 작년 10월 북미간 세네바 합의 이후에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김일성 조문 거부에 대한 사죄, 국가보안법 폐지, 미전향 장기수 송환 등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며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북미관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주장도 주한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수

로 지원 문제가 타결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대미 접촉의 연결 고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공식적인 남북경협 관계 및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 대한 주 적대관계의 설정이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주장을 통해 살펴볼 때, 향후 김정일 체제하에서의 제한적 경험은 남한 기업에 대한 선별적 개방(정부차원에서라기 보다)과 기타 선진국에 대한 대외개방으로 상당한 정도 가시적인 경제성과를 얻고 그것이 김정일 체제의 안정으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 때까지 남북경협은 남한이 의도하고 있는 통일 지향적 형태의 경험이라기 보다는 김정일 체제가 의도하고 있는 체제 유지적 경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남한이 직면한 문제는 남한의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과 김정일 체제의 체제 유지적 경험 정책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북한의 체제 유지적 경험 정책에 의해 경험의 단속(斷續)이 반복되며 남한이 의도했던 페이스대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공멸위협 전략에 휘말려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체제 유지적 경험 정책을 남한이 의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 지향적인 경험 관계로 유도하고, '김정일 이후 체제'와도 이와 같은 통일 지향적 경험의 연속성을 확보

하는 것이다. 상호 통일 지향적 경험 관계가 궁극적인 경제통합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논리의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II. 남북경협의 전략적 대응 방안

#### 1. 남북관계의 게임이론적 분석

남북경협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살펴보기에 앞서 남북한의 경험 문제보다 다소 포괄적인 기존의 남북한의 관계를 게임이론의 이득구조로 설명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제로섬 게임적 상황인식과 남북한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적으로 인식하지는 않고 상호 협조 시에는 양자 모두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상호간의 협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황인식인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2차 대전 이후 냉전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특히 한국전쟁 이후 얼마간의 남북한 관계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의 이득구조를 가진 관계로 보다 적절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제로섬 게임적 상황인식이란 남한이 선호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북한이 제안하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남한에게 손해가 된다는 엄격한 의미의 냉전적 사고이다. 과거 남한이 제시하는

어떤 통일정책이나 경험 논의도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으로 인식되고, 북한이 제시하는 어떠한 논의도 남한의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전략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의 상황인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 하에서는 남북한간에 어떠한 협력이나 관계개선의 노력도 존재하기 힘들다.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는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사안에 따라 현재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 관계의 제로섬 게임적 상황인식은 1970년대 중반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 희석되고, 또한 그때를 기점으로 남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한 후 체제 경쟁적 상황으로 접어들고 또한 남북한 모두 협력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탐색할 때의 상황인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관계를 넌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으로 인식하지만 남북한 모두 다음과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의 이득구조이다. 즉 남북한 모두 상호 협조가 보나 나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기대하고 있지만, 남한의 협조에 대하여 북한이 배반하는 상황(Cf) 보다는 차라리 남북한 모두 배반하는 상황(Ff)을 선호하고, 남북한 모두 배반하는 상황 보다는 상호 협조하는 상황(Cc)을 선호하며, 상호 협조하는 상황보다는 상대방의 협조에 대하여 배반하여 일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Fc)을 선호하는 선호관계구조를 가지는 상황이다(즉, 남한은  $Fc > Cc > Ff > Cf$ , 북한의 경우는  $fC > cC > fF > cF$ ). 이는 남북한 모두 상대방이

배반하기보다는 협조를 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기는 협조보다 배반을 선호하는 선호관계를 나타낸다. 남북한 모두 이런 유형의 선호관계를 가지는 상황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으로 표현된다<sup>1)</sup>.

<표 1> 체제경쟁의 이득행렬

남한 \ 북한	협조(c)	배반(f)
협조(C)	(3,3)	(1,4)
배반(F)	(4,1)	(2,2)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두 죄수가 징벌죄에 대한 증거만 갖고 있는 검사를 두고 벌이는 게임으로서 두 죄수나 중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면 둘 다 가벼운 형을 받을 것이나(Cc), 둘 다 시인한다면 중형을 받을 것이며(Ff), 한쪽은 부인하고 다른 한쪽은 시인한다면 부인한 쪽은 극형을 받고(Cf), 시인한 쪽은 석방되는(Fc) 게임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둘 다 배반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다<sup>2)</sup>. 상대방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도 나로서는 배반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의 관계가 분명히 넌 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적 상황이고 상호배반 보다 상호협조가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체제 경쟁적 상황이라면 남북한의 득실구조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2. 남북경협의 게임이론적 분석

현단계 남북한 경협의 교착상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남북한이 동일하게 위와 같은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부리가 있다. 적어도 남한의 경우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같은 남북경협에 대한 선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협조와 배반의 전략을 남북경협에 대해 취할 자세로 바꾸어 통일 지향적 경협전략(C)과 체제 유지적 경협전략(F)으로 구분하여도 무리가 없다.

우선 북한이 배반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협조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남한은 선호하고 또한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즉 북한의 어떠한 전략에 대하여서도, 남한은 배반전략을 택하기보다는 협조전략을 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가정하자. 이와 같은 경우 남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이 배열된다.  $Cc > Fc > Cf > Ff$ . 즉 남한은 남북한 모두 협조전략을 택하는 상황(Cc)을 가장 선호하며 남북한 모두 배반전략을 택하는 상황(Ff)을 가장 하위에 두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협을 바라보는 남한의 시각 가

1) 편의상 Fc, Cc, Ff, Cf에 대하여 4, 3, 2, 1의 효용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협조와 배반에 대하여서는 대문자 C, F로 표기하고 북한의 협조와 배반에 대하여서는 소문자 c, f로 표기하였다(C는 Cooperation, F는 Fink의 머리글자를 취한 것임).

2) 내쉬균형이란 모든 행위자의 선택이 다른 행위자들의 선택에 대해 최선의 반응일 때 그 행위자들의 선택을 내쉬균형이라고 한다(내쉬균형 및 이하의 게임이론에서 등장하는 개념의 보다 자세한 수리적 정의는 Drew Fudenberg & Jean Tirole, *Game Theory*, The MIT Press, 1992 참조).

운데 북한의 배반전략에 대하여 남한 또한 배반전략을 택하는 상황(Ff)을 가장 하위에 두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미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대내외적인 이유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적 상대가 되지 않는 마당에 북한의 체제 유지적 경협 정책에 대하여 동일한 전략으로 반응하는 것은 경협을 활성화를 바라는 남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한 관계는  $Fc > Cf$ 의 관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적인 이득행렬로 설명하자면 이는 상대방에 의해 배반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배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표현하는 선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남북한의 경협에 대응시켰을 때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c는 북한의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에 대하여 남한이 체제 유지적 경협 정책을 택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북한의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은 근본적으로 체제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남한이 체제 유지적 경협 정책을 택하는 상황이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경협을 이득을 얻지 못하고 체제불안요인만 유입되는 상황이다. 결국  $Fc > Cf$ 란 남한의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에 대하여 북한이 계속해서 체제 유지적 경협 정책으로 경협 관계의 단속을 반복하고 핵위기를 조성하거나, 또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남북 경협이 북측에 돌아가는 이득이 북한 주민의 후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지 김정일 체제의 정권유지 차원으로만 귀속되는 것이라면 흡수통일을 배제하지 않고 김정일 체제의

조기붕괴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협에 대한 선호관계는 남한이 배반전략을 택하기보다는 협조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각각에 대하여 북한은 자기의 배반전략을 협조전략보다 선호하는 것을 가정하자. 이와 같은 경우 북한의 선호관계는 앞에서 본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동일한 선호구조를 가지게 된다( $fC > cC > fF > cF$ ). 즉 북한은 남한이 협조전략을 택하고 북한이 배반전략을 택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남한의 흡수통일 기도를 가장 하위에 두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협에 대한 선호구조가 위와 같다고 할 때 이를 이득행렬로 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남북경협의 이득행렬

남한 \ 북한	통일지향(c)	체제유지(f)
통일지향(C)	(4,3)	(2,4)
체제유지(F)	(3,1)	(1,2)

위와 같은 이득구조 하에서는 남한의 경우 북한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든 협조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북한의 경우 남한이 어떠한 전략을 택하든 배반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남한의 경우 협조전략이 우위전략(dominant strategy)이며 북한의 경우 배반전략이 우위전략이다. 따라서 남한은 협조전략을 택하고 북한은 배반전략을 택하는 것이 우위전략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으로서



유일한 내쉬균형이 된다. 남한의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과 북한의 체제 유지적 경협 정책이 균형으로 결정된 남북한 경협 관계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정태적 상황하에서의 남북경협

현재 남북한의 경협이 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도 많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남북한 경협의 정체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자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남한의 경협에 대한 선호관계가 보다 통일 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 즉 남한이 남북 모두 협조 전략을 택하는 상황(Cc)을 가장 선호하고 남북 모두 배반전략을 택하는 상황(Ff)을 가장 하위에 두며, 북한에 배반당하는 상황(Cf)을 남한이 배반하는 경우(Fc) 보다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Cc > Cf > Fc > Ff$ ). 남한은 협조전략을 택하는 것이 우위전략이며 북한은 배반전략을 택하는 것이 우위전략이어서 현재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남북한 모두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을 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최선의 상황은 아니다. 남북한 모두 협조전략을 택하는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선의 상황일 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남북한 경협의 구도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변화의 유인도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남북경협의 현상태는 단순히 체제 경쟁적 입장에서(남한의 선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제통합이라는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다. 만약 남북경협을 통해 얻는 북한의 효용이 북한 주민 전체가 누리는 경협의 이득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김정일 체제의 유지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는 경협의 목적에 비추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남북한의 완전한 경제통합을 남북한 양지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수준으로 가정한다고 할 때 경협의 의의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고 통일비용을 시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이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을 택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경협을 바라보는 북한의 선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대외적인 요인과 대내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외적인 요인이란 만약 북한이 경협에 있어 협조전략을 택했을 때 남한이 배반하여 배반전략을 택할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북한정책의 틀 속에서는 원인을 찾기 힘들다. 현정부에서는 흡수통

일을 배제하고 단계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공포하였고, 또한 이는 어느 정도 북한도 인식할 정도로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대내적인 요인이다. 즉 북한의 협조전략에 대하여 남한이 배반전략을 택할 가능성(cF) 때문이 아니라 상호간의 협조전략을 택하는 상황(cC)이 가져올 김정일 체제의 붕괴 우려가 선호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남한도 상호간의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이 가져올 김정일 체제에 대한 체제불안요인의 유입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상호간의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보상도 가까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한의 협조전략에 대하여 북한의 배반전략에서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은 <표 2>에서와 같이 (2, 4)이다. 만약 북한이 차선의 상황을 선택하여 남북한 공히 협조전략을 택한다면 남북이 각각 얻을 수 있는 효용은 (4, 3)이다. 북한은 1 만금을 잃고 남한은 2 만금을 얻는다.<sup>3)</sup> 남한은 이 가운데 1 만금의 효용을 가져오는 이득을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사용하여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 1 만금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이득을 북한 주민의 후생증대를

위해 사용할 용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 또한 경험의 이득이 체제유지와 주민 후생을 위해 배분되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며, 만약 알고 있다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험과 함께 남한에 의한 체제유지의 보장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이 상호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을 택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것은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단계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을 이루고 이런 바탕 하에서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을 택한다는 근본적인 입장의 제시가 (또한 남한 정책이 북한에 확신을 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북한의 상호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상호간의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에서 오는 이득으로 김정일 체제의 체제유지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렵다는 것이다.

#### 4. 반복게임의 상황하에서의 남북경협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 모두 통일 지향적 경험 정책을 택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의 경험게임은 한번만 이루어지고 끝나고 마는 일회용 게임이 아니라 다기간에 걸쳐 여러 국면을 보이면서 진행되는 반복게임이라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향후 진행될 남북한의 경험을 반복게임의 상황으로 가정한 가운데, 첫째, 위에서와 같은 경험에 대한 선호관계하의 게임이 하

3) 위에서 제시된 효용은 서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기수적인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이하에서도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소 혼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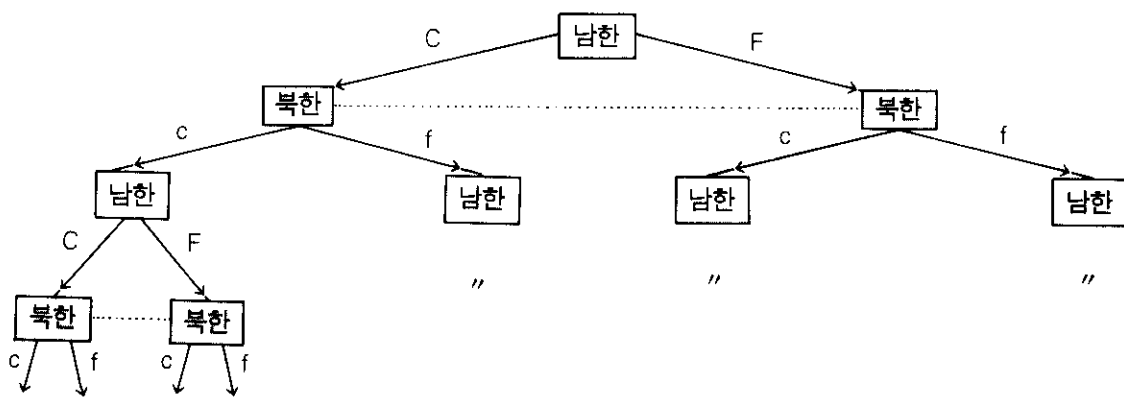
위 단계에서 부분게임으로 단순 반복되는 경우, 둘째, 배반에 대하여 상호 보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의 종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한 경우의 반복게임을 통해 상호 협조적인 경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다기간에 걸친 진행되는 남북한 경험게임을 전개형(extensive form)을 통해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부분게임 완벽 내쉬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sup>4)</sup>의 개념을 통해 전개형으로 표시된 반복게임에서의 남북한 경험의 상호 협조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의 반복게임은 각 단계(stage)내에서는 상호간에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게임(simultaneous-move game)이고, 각 단계간에서는 순차적인 게임(sequential game)이다. 즉 각 단계 내에서는 상대의 전략 선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전략을 선택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게임의 결과를 안 상태에서 다시 위와 동일한 게임을 행하는 것이다. 이 반복게임은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므로 후방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통해 부분게임 완벽 내쉬균형을 찾을 수 있다. 비록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게임들이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게임을 포함하고 있지만 각 부분게임은 우위전략균형(dominant strategy equilibrium)으로서 유일한 내쉬균형을 가지고 있다. 처음 단계의 각각의 이득벡터에 이를 더하여 처음 단계에서의 내쉬균형을 찾으면 이것이 부분게임 완벽 내쉬균형이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에서도 남한은 협조, 북한은 배반이 내쉬균형으로서, 반복되는 게임이 남북한 경험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복게임이 무한히 반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위의 결과는 현재와 같이 주어져 있는 남북한의 경험에 대한 선호관계 하에서는 자명한 결과이기도

<그림 1> 전개형에 의한 반복게임의 표시



4) 부분게임 하에서도 내쉬균형을 이루는 참가자의 전략집합을 부분게임 완벽 내쉬균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설사 남북한의 경험에 대한 선호관계가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인식(상호 협조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복게임이 협조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두번째는 첫번째와 동일하게 각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는 게임이지만, 첫번째 단계의 게임에서 다음 단계의 전략 선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속력 있는 공언(binding commitment)을 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단계의 전략선택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공언이란 첫번째 단계에서 북한이 만약 협조전략을 택하면 다음 단계에서 남한의 전략은 협조를 택하고, 첫번째 단계에서 북한이 배반전략을 택하면 다음 단계에서 남한의 전략은 배반전략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북한 모두 협조전략을 택한다고 가정하자. 반복게임에서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가운데 이는 보상보복전략(tit for tat strategy)으로 불리고 있다. 아래의 <표 3>은 보상보복전략을 포함한 반복게임의 이득행렬을 표시한 것이다.

위의 이득행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 할인율  $\delta$ 가 0.5보다 크다면 상호간의 보상보복전략은 부분게임 완벽 내쉬균형이 된다. 즉 남한의 보상보복전략(T)에 대하여 북한의 보상보복전략(t)이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주며, 북한의 보상보복전략에 대하여 남한의 보상보복전략 또한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위에서는 상호간의 보상보복전략을 포함하여 3개의 내쉬균형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위의 구속력 있는 공언이 실행된다면 상호간의 보상보복전략은 상호간의 협조전략을 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해(解)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속력 있는 공언이 단순히 위협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복 또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보상보복의 단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여 그것이 경험성적 자체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책별 혹은 사안별 구체적인 보상보복의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실행가능성 차원에서 상대방에

<표 3> 보상보복전략의 이득행렬

	계속협조(c)	보상보복(t)	계속배반(f)
계속협조(C)	$(\frac{4}{1-\delta}, \frac{3}{1-\delta})$	$(\frac{4}{1-\delta}, \frac{3}{1-\delta})$	$(\frac{2}{1-\delta}, \frac{4}{1-\delta})$
보상보복(T)	$(\frac{4}{1-\delta}, \frac{3}{1-\delta})$	$(\frac{4}{1-\delta}, \frac{3}{1-\delta})$	$(\frac{2-\delta}{1-\delta}, \frac{2(2-\delta)}{1-\delta})$
계속배반(F)	$(\frac{3}{1-\delta}, \frac{1}{1-\delta})$	$(\frac{3-2\delta}{1-\delta}, \frac{1+\delta}{1-\delta})$	$(\frac{1}{1-\delta}, \frac{2}{1-\delta})$

계 보상보복전략의 확신을 갖게 할 것이다.

세번째는 반복게임의 종점(stopping point)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내포한 경우의 반복게임의 상호 협조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구체적으로 이것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이나 붕괴로 인해 더 이상의 경협게임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경우의 반복게임이 된다. 이와 같은 반복게임의 상황에서 남북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내포된 경우의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의 개념 및 남북 경협 분석을 위한 가정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다. 첫째는 지속가능확률(continuation probability)의 개념이다. 이는 반복게임의 각 단계의 초기에 과거에 반복게임의 어떠한 게임진행의 경과를 가졌는가에 관계없이 향후 진행될 게임의 지속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각 단계의 초기에, 지속가능확률을  $p$ 라고 가정한다면  $N$ 단계까지 반복게임이 지속될 가능성은  $p^N$ 이다. 따라서 반

복게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기대횟수는  $q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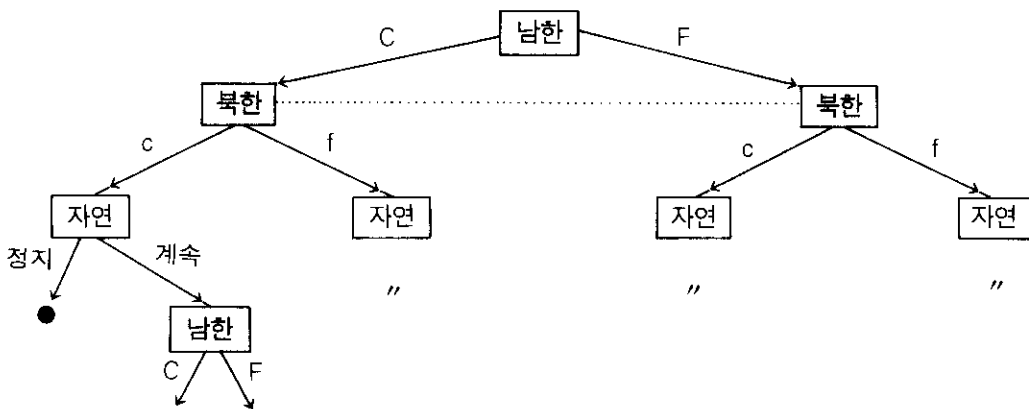
$$\sum_{i=1}^{\infty} p^i$$

를 0.5로 가정한다면 기대횟수  $q$ 는 2가 되는데 이는 각 단계의 초기에 '평균적으로' 2회의 게임을 더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남북한이 각기 순수전략(pure strategy)만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 모두 하나의 순수전략은 다음과 같은 수열로 표시된다.

$$S_j = \{ T_i^j(H_i) \}_{i=1}^N, \quad j = S, N.$$

여기서  $S, N$ 은 각각 남북한을 나타내며  $H_i$ 는  $i$ 기까지 남북한에 의해 선택된 전략선택의 결과, 즉 게임의 내력(history)을 나타낸다.  $T_i^j(H_i)$ 는 '게임의 지속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조건(nature)'이  $i$ 기의 게임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때, 게임의 내력에 의존하는  $i$ 기의 전략선택을 나타낸다. 따라서 남북한

<그림 2> 종점이 불확실한 경우의 반복게임



각각의 순수전략  $S_S, S_N$  은 게임의 지속에 의존하는 각 단계의 전략선택의 수열로서 표시된다. 셋째로 주어진 순수전략의 쌍으로부터 오는 효용의 현재가치화된 크기는 다음과 같다

$$: \sum_{i=1}^{\infty} \{p\delta\}^{i-1} U_i. \text{ 마지막으로 단순화를 위해}$$

지속가능확률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정보 (common knowledge)이며 게임의 종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협조와 배반의 두 전략을 계속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정의 및 가정 하에 종점이 불확실한 경우의 반복게임을 전개형으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반복게임 하에서 상호 협조를 가져오는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서 보상보복전략과는 달리 보복의 강도를 높인 전략을 사용하며 또한 남북한이 취하는 위협은 상호간에 확신을 주는 것을 가정한다. 여기에서의 상호간에 취하는 위협은 다음과 같다. 즉 남북한 각각은 상대방이 협조하는 한에서 협조를 한다. 만약 일방이 배반을 하면 그 이후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경쟁게임에서는 무조건 배반전략을 택하는 복수전략(grim strategy)<sup>5)</sup>이다. 우선 북한이 남한이

이와 같이 정의되는 복수전략을 택했다고 믿는다고 하자. 만약 북한이 처음 단계에서 배반전략을 택하였다고 하면 당연히 북한은 두 번째 단계 이후의 남한의 모든 전략은 배반전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복수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초기 단계부터 경쟁게임에 협조전략을 택하게 할 가능성은 있는가?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배반전략을 택하게 되면 북한은 4의 효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일단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배반은 두 번째 단계 이후의 계속적인 남한의 배반전략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또한 계속적으로 배반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은  $\frac{2(2-p\delta)}{1-p\delta}$  이다. 그렇

지 않고 북한이 초기 단계에서 협조전략을 택하고 남한과 동일한 복수전략을 택한다고 한다면 이때 얻을 수 있는 북한의 기대효용은  $\frac{3}{1-p\delta}$  이 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협조전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배반전략에서 오는 기대효용보다 협조전략을 택하는 데서 오는 기대효용이 더 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p\delta > 0.5$ 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복수전략 하에 진행되는 남북경협의 반복게임은 부분게임 완벽 내쉬균형으로서 상호간에 협조적인 경쟁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T_i^j(H_i) = F$  (또는  $f$ )로 표시할 수 있다.

5) 이 전략을 보다 형식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집합  $HC$ 를 가정하자.  $HC$ 는 남북한 쌍방이 모두 항상 협조전략을 택한 모든 내력의 집합이라고 할 때, 복수전략은  $T_i^j = C$  (또는  $c$ ), 1보다 큰  $i$ 에 대해서, 만약  $H_i$ 가  $HC$ 의 원소면  $T_i^j(H_i) = C$  (또는  $c$ ),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게임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속가능확률  $p$ 와 상호 협조적인 경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의 조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할인율  $\delta$ 에 대하여 지속가능확률이  $p > \frac{1}{2\delta}$  일 때이다. 이것은 남북한 경험의 지속가능성이 낮을수록 남북한 경험의 협조적인 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지속가능확률이 0인 경우 남북한 경험은 현 상태와 같이 남북한 협조전략과 북한의 배반전략으로 결정되는 일회용 게임(one-shot game)으로 끝나게 된다. 이는 포크정리(folk theorem)<sup>6)</sup>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게임의 지속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조건(nature)을 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북한의 김정일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상정한다고 할 때, 김정일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크고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향후 남북한 경험의 협조적인 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게임이론적으로 뒷받침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

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의 협조적인 경험 관계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체제의 안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상호 협조적인 경험의 지속보다는 일회용 게임으로 단속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험이 단속을 반복하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이는 또한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의 바탕 위에 서고 난 뒤 즉 반복게임의 지속가능확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의 경험에 대한 상호관계가 현재와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는 한, 협조적인 경험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배반에 대해서 필요한 강한 제재의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반복게임에서의 지속가능확률이 낮아 남북한 경험의 상호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인 체제 불안정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한시적인 김정일 체제와의 남북경험의 협조적인 관계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은 본격적인 남북경험의 대상을 '김정일 이후 체제'로 상정하는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6) Folk theorem은 몇몇 기술적인 제약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어떤 주어질, 개별합리성(individually rational)을 가지고 실행가능한 이득벡터는 반복게임의 상황하에서 지속가능확률이 충분히 1에 가까운 때 부분게임 완벽 균형의 이득벡터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득벡터들은 게임 참가자의 대칭성(symmetry)을 가정하여 그 수를 줄일 수 있고 지속가능확률이 1에 가깝지 않으면 균형 이득벡터의 집합은 훨씬 적어질 수 있다. 만약  $p$ 가 충분히 작다면 반복게임은 거의 일회용 게임이 되고 균형 이득벡터의 집합은 일회용 게임의 이득벡터와 일치하게 된다.

#### IV. 정책별 대응방안: 중심이동전략

##### 1. 중심이동전략의 정의

위의 분석에 의하면 남북한 경험에 대한 상호관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한 상호간에

협조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것은 보상보복전략과 강한 형태의 보복전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보상보복전략과 강한 형태의 보복전략을 현실적인 적용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위의 두 가지 전략을 대응전략이라는 형태로 규정한다고 할 때, 대응전략은 정책별 대응전략과 사안별 대응전략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정책별 대응전략이란 보다 상위 개념의 정책전반의 기초에 대한 대응전략(보복전략)을 말하며 사안별 대응전략이란 남북한의 구체적인 교역이나 협력과정에서의 대응전략(보복전략)으로서 전자에 비하여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대응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남한은 북한의 배반전략에 대한 마땅한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의 협조에 대해서는 나뉠대로의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북한의 배반전략에 대해서는 경험의 단속을 반복하는 수밖에 다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정책별 대응전략의 예가 핵-경협 연계전략이다. 지난 11월 8일 기업인 방북과 조보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허용 조치나 11월 2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성협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위의 조치를 뒷받침한 것 등은 지난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남한 측에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제기되어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남한의 보다 과감한 경험에 대한 자세가 경험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되지만 위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남북한의 선호관계 하에서는 남한 일방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남한이 의도하고 있는 경험의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히려 반복게임의 상황하에서 진행되는 경험에서 협조에는 적절한 보상과 배반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보복전략이 이와 같은 선호관계 하에서 상호 협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극단전략(brinkmanship)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중심이동전략(skip strategy)이라 불릴 수 있는 정책별 대응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극단전략이란 국제원자력기구의 탈퇴 위협 등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핵위기를 조성하는 공멸위협전략 등을 의미한다. 혹은 현재 제기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주장이 단순히 경수로 지원 문제 이후를 대비한 북미간 지속적인 대화채널의 확보 차원을 넘어 주한 미군 철수나 남북한의 직접대화를 거부하는 용도로써 사용되는 등 지속적인 대남 교란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의 북한의 행동을 말한다. 여기에 대응하여 제시하는 중심이동전략이란 정부는 현재의 흡수통일 배제정책을 원칙으로 하되, 김정일 체제가 계속해서 NPT 탈퇴를



빌미로 한반도에서의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남한배제의 원칙하에 경협을 단속을 반복한다면, 남한의 정부는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북측대상으로서 '김정일 이후 체제'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남한은 김정일 체제에 대한 흡수통일 배제정책도 재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김정일 이후에 등장할 (어떤) 체제에 대하여서도 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김정일 체제의 지배층 분열 및 김정일 체제의 조기붕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강한 형태의 보복전략으로서 중심이동전략이 김정일 체제의 극단전략에 대한 위협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취하고 있는 극단전략에 대한 분석과 함께 김정일 이후 체제에 대한 예상도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북한의 극단전략에 대한 중심이동전략의 최소한의 효과를 예견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한다.

## 2. 중심이동전략의 기대효과

전통적인 병서의 원리로 보면 김정일 체제의 극단전략은 자국의 국민 모두를 이용해 사지(死地)<sup>7)</sup>에 몰아 넣음으로써 배수의 진을 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 전략적 효과는 첫

째, 아군의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결사항전의 전의를 고양시키고, 둘째, 이와 같은 전의가 적군에 전달되어 적군의 공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수진의 전략적 효과는 위의 두 가지 점이 충족될 때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들의 패진은 전사(戰史)에나 간략히 기록될 뿐이고 전략적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심이동전략은 김정일 체제의 공멸위협전략에 대하여 첫 번째 충족요건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김정일 이후에 등장할 어떤 체제에 대해서도 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배수에서 진을 치고 있는 참모들에게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군과 관료) 결사항전의 전의를 약화시키고 분열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는 체제의 정통성이 약하거나 체제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고자 하는 정도가 약할수록 효과는 클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위협전략이 최소한의 효과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이후 체제와의 협력의 가능성이 최소한 현재체제에서보다는 높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김정일 이후에 등장할 체제는 민중봉기에 의한 김정일 체제의 붕괴와 민주정부의 등장, 군부나 테크노크라트 체제 혹은 이들의 연합형태의 권력구조 등 몇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군부와 테크노크라트가 결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 어떠한 체제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주체사상에 기만을 둔, 죽은 김일성의 살아있는 카리스마를 이

7) 사지는 손부가 제시하는 구지(九地) 가운데 하나이다. 위치와 지형에 따른 전투의 영향을 말하는 구지편에서 “빨리 전투를 끝내면 생존할 수 있으나 빨리 끝내지 못하면 적의 포위에 빠져 퇴로를 차단당하여 섬멸되는 곳”으로 정의하고 사지에서는 사력을 다하여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모택동 사망이나 스탈린 사망이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부정함으로써 ‘김정일 이후 체제’(軍官聯合體制)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권력의 이동이 비정상적인 방법(내부분열 및 쿠데타)에 의해 이루어질수록 그와 같은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카리스마를 제거하고 나면 ‘김정일 이후 체제’는 어쩔 수 없이 피폐된 경제의 가시적인 회복성과를 통해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 더하여 남한의 전폭적인 지원약속과 대폭적인 상호군축과 남북연합이나 연방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통일 지향적인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짐작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대응전략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체제의 집권층 분열정책은 단기적으로, 남한내부의 분열정책에 열중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에 대하여 내부 단속에 눈을 돌리게 하여, 대남 분열정책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집권층이 김일성 일가와 심복군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이와 같은 전략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김정일 반대파의 세력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현 집권층의 분열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약 어떤 이유에서

긴 ‘김정일 이후 체제’가 등장하게 된다면 남한의 이와 같은 정책의 지원을 받은 ‘김정일 이후 체제’와의 경협은 통일 지향적 경협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남북경협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법은 김정일 이후 체제에 등장할지도 모를 강경 군부의 호전성으로 인해 김정일 체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쉽게 상징하고, 김정일 체제의 극단전략에 대하여 대안 부제의 현실에 수수방관하는 대신 최소한의 정책적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본 글에서는 현단계에서 남북한의 경협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남북한 경협에 있어 보다 협조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글의 중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단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남한의 통일 지향적 경협 정책에 대하여 북한이 체제 유지적 경협 정책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서로 상이한 정책 시행의 바탕에는 남북한 상호간의 경협에 대한 선호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협에 대한 선호관계에는 경협과 함께 체제불안요인의 유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협에 대한 북한의 선호관계의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단순한 반복게임 하에서 향후 진행될 경협은 상호 협조를 가져올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현 선호관계 하에서 상호 협조를 가져오는 것은 협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그리고 배반에 대해서는 강한 보복을 가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협의 활성화를 바라는 일각의 요구대로 남한 정부의 과감한 경협에 대한 제한 조치 철폐나 남한의 인내와 아량이 반드시 상호 협조적인 경협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

셋째,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여, 향후 진행될 경협을 종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반복게임으로 분석하여 볼 때, 지속가능확률이 낮을수록 상호 협조적인 경협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호 협조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우선 김정일 체제의 체제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인 등장과 함께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한 체제개혁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해 내부통제에 열중하고 핵위기 조성을 통한 극단전략을 택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정책별 혹은 사안별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들식 사회주의나 핵위기 조장과 같은 극단전략을 통해서 김정일 체제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없고 따라서 협조적인 경협 관계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오히려 상호 보복전략이 협조적인 경협 관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배반전략에 대해서는 정책별 대응전략과 사안별 대응전략으로 구분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일로 경협의 단속이 반복되어서도 안되고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교란 행위나 핵위기 조성에 대하여 대안 부재의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중심이동전략은 이에 대응한 정책별 대응전략의 하나로 북한의 극단전략에 대한 위협전략이지만, 근본적인 체제의 불안정성을 내포한 김정일 체제의 이후를 대비하지는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협에 대한 북한의 현재 선호관계와 남한을 주 적대관계국가로 상정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남북한 관계 및 경협의 획기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수로 지원문제가 나름대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경협은 남한에서 의도하는 수준이 되기보다는 김정일 체제의 체제 유지적 경협정책에 맞추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에 대한 단기적인 업적위주의 경협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상호 통일 지향적 경협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극단전략에 대해서는 대북 경협의 근본적인 변화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